

보도시점 (온라인) 2025. 2. 16.(일) 12:00  
(지면) 2025. 2. 17.(월) 조간

## 행정안전부, 자치단체와 협력해 지방 서민물가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간다

- 지방공공요금 인상 최소화 및 시기 조정, 착한가격업소 12,000개소 지정 확대
- 행정안전부, 2.17.(월) 17개 시도 ‘지방물가 담당자 워크숍’ 개최

- 행정안전부는 지역 민생경제 회복 지원을 최우선 과제로,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방물가 안정을 위해 ‘2025년 지방물가 안정관리 추진계획’을 마련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적극 추진하고 있다.
- 세부적으로 지방공공요금과 개인서비스요금 관리를 강화하고, 착한가격업소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, 2월 17일(월) 17개 시도 물가담당자 워크숍을 개최해 자치단체와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다.

### <지방공공요금 안정적 관리>

- 먼저, 행정안전부와 자치단체는 지방공공요금 인상을 최소화하고, 특정 시기에 공공요금이 집중적으로 오르지 않도록 조정해 요금 인상으로 인한 서민 부담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.
- 자치단체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지방공공요금 동결 또는 인상폭 조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, 불가피한 인상 요인은 최대한 시기를 분산·이연해 서민 부담을 줄이고 있다.
-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의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관련 노력에 재정 인센티브를 지원하고, 대중교통 요금 등 서민 생활과 직결되는 요금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자치단체와 지속 협력하고 있다.
- 또한,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가 공공요금 검토를 위한 물가대책위원회 개최 시 요금 현실화율, 인근 자치단체 요금 등의 분석자료를 제공해 자치단체가 보다 합리적인 요금 관리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.

- 아울러, 상반기 중 지방공공요금의 지역별 현황을 통합 공개해 주민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보다 합리적인 요금 조정을 유도하는 한편, 자치단체의 원가 절감 노력과 정책적 차별성 등을 평가해 인센티브와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.
- 이를 통해 자치단체가 책임 있게 물가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, 보다 투명하고 객관적인 요금 정책을 펼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.

### <착한가격업소 지정·지원 확대>

- 개인서비스 요금 안정을 위해 착한가격업소도 지속 확대된다.
  - 행정안전부는 올해 말까지 착한가격업소를 1만 2천 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며, 이를 위해 ▲대국민 공모 상시 운영, ▲방문 인증 챗봇지, ▲우수업소 인센티브 제공 등 소상공인과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.
  - 좋은 서비스를 주변상권 대비 저렴하게 제공하는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확대해 개인서비스 요금 안정을 유도하고, 자발적인 물가 안정 노력을 확산해 지역 내 착한가격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힘쓸 예정이다.

### <지방물가담당자 워크숍>

- 한편, 행정안전부는 지방물가 안정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2월 17일(월), 17개 시·도 물가담당자들과 함께 ‘2025년 지방물가담당자 워크숍’을 개최한다.
  - 워크숍에서는 ‘2025년 지방물가 안정관리 방안’을 공유하고, 자치단체별 추진 현황과 애로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.
  - 특히,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 집행 과정에서도 기대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.
-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“어려운 여건 속에서 물가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지방공공요금과 개인서비스 요금 안정을 적극 추진하고, 현장과 함께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지속 마련하겠다”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지방재정경제실 지역경제과	책임자	과 장	신지혜 (044-205-3902)
		담당자	사무관	박진속 (044-205-3921)



더 아픈 환자께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
**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·의원으로**

